

지역상품권·노조보조금 메스…재량지출 구조조정

정부, 2024년 예산안 편성지침
현금성 지원→취약층 맞춤형지
청년 일자리, 국방·치안 확대

정부가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등 현금성 지원 사업과 불투명하게 관리되는 보조금을 집중적으로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가 제시해온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대신 약자 복지와 청년 일자리, 국방·치안 등 국가의 기본 기능은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답은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확정했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내년 재정운용 기조와 투자 중점, 재정혁신 방향 등을 담은 원칙이다. 각 부처가 내년 예산안 편성 때 준수해야 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므로 이 지침의 공개는 내년 예산 편성의 시작을 의미한다. 매년 예산 편성 지침 발표 시점이 3월 말이므로 이번이 윤석열 정부가 내놓는 첫 지침이다. 정부는 엄격한 재정총량 관리로 건전 재정 기조를 견지하겠다는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경제의 도약과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재정의 역할을 하겠다는 가치를 앞세운 문제인 정부 마지막 예산지침(2022년)과 철학 차이가 감지된다.

강조점이 재정의 역할에서 건전재정으로 이동한 것이다. 건전재정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지출을 철저히 감축하되 미래 투자와 체질 개선을 과감하게 추진해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재정 철학을 의미한다. 정부는 무분별한 현금성 지원사업과 부당·불투명하게 지급된 보조금, 복지사업의 도덕적 해이 등 재정 누수 요인을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역사랑상품권과 같은 현금성 지원을 과감하게 구조조정, 취약계층 대상의 맞춤형 복지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다. 100조원을 넘는 보조금에 대한 관리 강도도 끌어올리기로 했다. 국가가 지급한 보조금이 불투명하게 운영되

고 있다면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페널티를 주거나 지원을 감축하는 등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회계장부 공개를 거부한 노조를 겨냥한 조치로 해석된다. 사회보장급여를 과다·반복 수급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복지 전달체계를 고도화하는 목표도 제시했다. 재량지출은 10% 이상 감축한다. 재량지출이 100조~120조원 수준임을 고려하면 10조~12조원 이상을 줄인다는 의미다. 집행이 부진하거나 관행적 보조·출연·출자금을 줄여 신규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공공부분의 경직성 경비를 억제한다. 공공부문이 직접 사용하는 업무추진비, 여비, 일반기관운영비 등에 대한 구조조정이 예상된다.

보급률이 주요국 수준에 이른 상·하수도 집행 상황을 감안해 적정 수준으로 맞추기로 했다. 물 투자는 가뭄·수해 등 기후위기 대응에 중점을 둔다. 다만 약자 복지와 청년 일자리, 국방·치안·사법·행정서비스 등 국가의 기본 기능에는 중점 투자하기로 했다. 미래세대를 위한 경제체질 개선, 사회구조 혁신에도 과감하게 투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기획재정부는 5월 말까지 각 부처로부터 받은 예산요구안을 토대로 6~8월 중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 국민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정부 예산안을 편성, 9월 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대책본부 남인순 본부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태원참사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이태원참사특별법 제정 속도

조사위 최장 1년 9개월 활동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대책본부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물론 정의당·기본소득당과도 연대해 정부·여당을 압박, 특별법 제정을 관철하겠다는 구상이다. 대책본부장인 남인순 의원은 “정의당·기본소득당과 특별법안 공동 발의를 협의하고 있다”며 “국회 법제실에 의뢰해 체계 및 자구 정

리를 거친 법안을 이미 제출받은 상태”라고 밝혔다. 남 의원은 “이 법안은 피해자의 권리를 명문화하는 한편 진상규명과 재발방지가 법 제정의 목적임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설치한다는 조항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의 조사 참여권, 사생활 보호권, 기억·추모·애도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등도 명시하고 있다”면서 “정부·여당은 특별법 제정에 적극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대책본부는 금주 내로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와의 간담회를 통한 법안 보완 작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남 의원은 “특별조사위 활동 기한은 일단 1년으로 하되 6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조사보고서 작성 기간까지 고려하면 최장 1년 9개월 정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책본부는 법 제정에 앞서 조직도 개편했다. 본부장은 남인순 의원이 계속 맡되, 간사 겸 부본부장은 이성만 의원이 맡기로 했다. 유가족지원단장은 이해식 의원, 제도개선 추진은 박주민 의원, 국민소통단장은 한준호 의원이 각각 담당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검찰 만능주의·법치훼손·반헌법 행위”

민주, 한동훈 ‘검수완박’ 비난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효력 인정 결정에 반발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28일에도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한 장관이 ‘검수완박’ 법이 검찰 권한을 박탈한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한 것이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유지하겠다고 한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법률가에게 ‘각하’는 치욕적 결과”라며 “주목받고 싶거나 ‘구속 수사권’은 검찰에게만 있다는 ‘검찰만능주의’ 때문에”라고 지적했다. 이상호 의원은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법무부 장관이 자기가 낸 권한쟁의 심판에서 졌는데 그 결정을 따르지 않는 태도가

맞나”라며 “법치를 훼손하는 발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현재(결정)에 불복하는 것은 반헌법적 행위”라며 “헌법수호의지가 없으면 현재에서 탄핵이 인용된 게 바로 직전 정권”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검수완박 시행령을 되돌리는 데 힘을 쏟을 분위기가 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미 불법 시행령을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그간 공정한 사개특위(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 개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내에서는 현재가 이번 결정에서 ‘위장 탈당’의 절차상 문제를 지적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복당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도 이어졌다. /연합뉴스

정부 “검정통과 일 교과서 깊은 유감”

독도 부당주장 강력항의

정부는 28일 일본이 일제강점기 조선인 징병 관련 기술의 강제성을 희석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가 지난 수십년 동안 이어온 무리한 주장을 그대로 답습한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

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제동원 관련 표현 및 서술이 강제성을 희석하는 방향으로 변경된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일본 정부가 스스로 밝혀온 과거사 관련 사죄와 반성의 정신을 진정성있게 실천해 나가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일 양국 간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미래를 짊어져 나갈 세대의 올바른 역사인식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 세대의 교육에 있어 보다 책임있는 행동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사람과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의료기관 세탁물 전문처리 기업!!]

호남 최대 최첨단 세탁시설 완비,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으로 철저한 품질관리, 효율적인 관리로 의료서비스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호남 지역을 대표하는 세탁 전문 시스템을 갖추어 친환경 세탁 문화를 위해 연구와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치(연속) 세탁기



다림시설



운반카트 고온소독 살균



(주)백양실업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신기길 93 T. (061)392-7900